



주간통일정세 2009-49(2009.11.30~12.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4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인민보안성 운영 과수원 현지지도(11/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보안성에서 건설해 운영하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본부를 최근 시찰한데 이어 이번에 인민보안성 과수농장도 돌아봄으로써 인민보안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냄.
 - 김 위원장은 이 과수종합농장에서 과일생산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 농장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과일 공급뿐 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 농장”이라고 평가
 - 김 위원장은 또 평양시 변두리에 위치한 석정 돼지공장(양돈장)과 석정 장아찌공장도 현지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등이 수행했으며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 때는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리병삼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등이 영접

나. 정치 관련

- **北, ‘북한인권법안’ 채택움직임에 광분(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인권을 구실로 반공화국(반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주장
 - 통신은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의 북한 인권법안 정식 채택 움직임과 유엔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을 지적하며 “동족대결을 체질화한 반민족 분자들의 반공화국 대결야망의 발로로서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
 - 통신은 이어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에 도전해 동족대결을 인권문제로 확대시키면서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는 한, 북남관계 개선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화폐개혁 혼란 대비 軍 전투태세(12/4, 러시아 코메르산트; 데일리NK; 조선신보)

- 북한 군이 최근 단행된 화폐개혁에 반발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전투준비 상태에 들어갔다고 4일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북한 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여러 도시에서 이번 화폐 개혁을 ‘강도(強盜)와 같은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언, 소식통들은 또 화폐 개혁 기간 북한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야 하고 주민들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쓸 수 없게 되면서 크게 당황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파견된 많은 외교관들이 북한 당국의 화폐 개혁을 되돌리려고 여러 모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최근 북·중 국경 인민경비대에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 자들은 현장사살을 해도 된다”는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함. 화폐 개혁과 관련된 ‘불순 세력들의 도주’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임.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먹고살기 힘든 계층이 많이 탈북했지만 앞으로는 갑자기 돈을 빼앗긴 능력 있는 중산층이 탈북 행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 정보 당국자는 “현재 집단 소요나 대량 탈북 등의 첩보는 없다”며 “북한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시위보다 탈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
- 함북 청진, 함남 함흥, 평남 평성 등에선 김일성 사진이 담긴 옛 화폐(5000원권)가 오물에 훼손되거나 찢긴 채 발견돼 보위부가 비상에 들어갔다고 함. 김정일을 비난하는 낙서와 뼈라(전단)도 나돌기 시작했다고 내부 소식통은 전언
- 데일리NK는 이날 “양강도에서 화폐 개혁 이후 한 채무자(빚꾼)가 갑자기 채권자(돈주)에게 ‘옛날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우기며 싸우다가 채권자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 신의주의 한 장마당에선 화장품 장사를 하던 40대 중반 여성이 당국을 비난하는 소리를 지르다가 보안원에게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음.
- 지금 북한 주민들은 화폐 개혁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돈을 잘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한 가구당 10만원(신권 1000원·우리 돈 4만~5만원) 수준이던 교환 한도를 늘려 1인당 5만원씩 더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저축 한도를 없애는 등 주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6일까지 화폐 교환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3일 현재 함북 회령·무산 등에는 신권이 도착하지도 않았다고 함. 이 때문에 교환 시기를 ‘신권 도착 후 1주일’로 바꿨다고 내부 소식통은 밝힘.
- 조선신보는 평양발로 “지난달 30일부터 화폐 교환사업이 북한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 보도



- **北, 노동자 월급은 종전 수준 유지(12/4, 연합)**

 - 100대 1의 화폐 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노동자 급여를 종전 수준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이는 사실상 노동자 급여가 화폐 개혁 이전에 비해 100배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주목됨.
 -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한 무역 일꾼은 4일 “노동자 급여는 화폐 개혁 이후에도 종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북한)당국의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화폐 개혁 이전 3천원을 받던 노동자에게 화폐 개혁 이후 신권으로도 3천원을 보장해줌으로써 사실상 100배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 이 일꾼은 “이번 화폐 개혁의 목적은 북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사회주의 조장 세력’의 지하 자금을 몰수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장사 등 지하 경제에 매달리는 것을 막고 사회주의의 건전한 노동 작풍을 형성하려는 조치”라고 설명

- **北, 화폐개혁 내각결정 하달(12/4, 연합)**

 - 북한이 화폐 개혁과 관련한 내각결정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짐. ‘좋은 벗들’은 3일 소식지에서 “화폐 교환에 관한 내각결정 423호가 내려졌다”며 “423-1호는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423-2호는 ‘경제관리체제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다”라고 전언
 - ‘좋은 벗들’은 또 “화폐 교환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소개, 또한 “평양시는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시를 내렸다”고 보도

- **北당국, 중국인 신권교환 제한 안뒤(12/3, 연합)**

 -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에 따라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면서 중국인 무역업자와 기업인들에게는 신권교환 한도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경제 전문가인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3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북중 교역을 하는 조선족들과 북한과 교역하는 한국인 업자들에게 들은 얘기”라면서 “중국 기업인들은 신권 교환 한도인 가구당 10만원이 적용되지 않고 1주일로 정해진 교환기간에도 제한이 없다고 한다”고 소개
 - 열린북한방송도 이날 “북중 국경 근처인 북한 무산의 소식통이 어제(2일) ‘중국인이 보유한 북한 돈에 대해서는 신권 교환한도가 사실상 없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을 통해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려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언

- **새 화폐 사용, 北, 평양주재 외교공관에 통보(12/2, 신화통신)**

 - 북한이 1일 평양 주재 각국 외교 공관에 기존 화폐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것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짐. 신화통신은



“북한 외무성 관리가 1일 각국 공관에 11월 30일부터 기존의 북한 화폐 사용이 정지됐으니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보도

- 이 관리는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최근 북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언급, 그러나 화폐 개혁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신화통신은 전언

● 北, 해상봉쇄로 상선항해, 선원안전 위협(11/30, 평양방송)

- 국제해사기구(IMO) 제26차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국제사회의 해상봉쇄로 상선의 자유항해와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평양방송이 30일 보도
- 북한은 지난 2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총회에 고능두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을 파견
- 고 국장은 총회 연설에서 “특정한 나라들의 정치적 동기에 따라 강요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와 봉쇄로 최근 평화적인 무역집배(컨테이너선)의 자유로운 항해와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국제해사 실천에서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을 무시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새 화폐 어떻게 달라졌나(12/4, 연합)

- 북한이 11월 30일 화폐개혁에 따라 새로 발행한 화폐는 구권과 비교해 2천원권의 지폐가 추가돼 총 9종의 지폐와 5종의 동전으로 구성, 지폐의 최고액권은 과거와 같이 5천원권이며 2천원, 1천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등임.
- 북한은 2002년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한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따라 그동안 5천원부터 1천원, 500원, 200원을 추가로 발행해왔는데 이번에 화폐개혁 조치로 2천원권이 새로 등장, 주화 종류는 1원, 50전, 10전, 5전, 1전으로 종전과 같음.
- 지폐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며 가로 145mm, 세로 65mm임. 그러나 화폐의 도안은 과거와 약간 달라졌음. 도안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 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 등 이른바 ‘3대장군’을 상징하고, 북한당국의 정책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음. 최고액인 5천원권은 과거와 같이 앞면에 김일성의 초상화, 뒷면에는 김일성의 고향인 ‘만경대 고향집’이 각각 그려져있는데, 다만 김일성의 초상화가 중년시절 정상차림에서 그의 사망 후 새로 그려진 초상화인 ‘태양상’으로 교체
- 새로 발행된 2천원권은 김정일만을 상징하는 그림만 담았음. 앞면에



는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밀영의 고향집’과 ‘정일봉’을, 뒷면에는 백두산 전경을 담음. 1천원은 구권이 구권 5천원과 똑같이 앞면에 김일성 초상화, 뒷면에 ‘만경대 고향집’이 그려져 있었는데 반해 신권은 앞면에 김정숙이 태어난 ‘회령 고향집’, 뒷면에는 항일빨치산들을 상징하는 삼지연 못가를 그렸음. 고액권 순서대로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이 담긴 것임.

- 500원의 경우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의 ‘조국개선’을 상징하는 평양시내의 ‘개선문’으로 바뀌었음. 200원짜리는 북한의 국화인 목란꽃에서 대중운동을 상징하는 ‘천리마동상’으로 바뀌면서 100원에 대신 목란꽃이 들어갔음. 50원에는 ‘사상중시’를 의미하는 인테리 노동자 농민이, 10원은 종전 노동자에서 ‘총대중시’를 의미하는 육해공군 병사, 5원은 구권과 같이 ‘과학기술 중시’를 의미해 과학자와 대학생을 담았음.
- 주화는 1원에 ‘김일성화(花)’, 50전에 ‘김정일화’, 10전에 진달래, 5전에 목란꽃, 1전에 철쭉을 그렸음.

● 압록강 대교, 단둥 하류 건설 유력(12/4, 연합)

-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압록강 대교가 단둥 하류인 랑터우(浪頭)와 평안북도 용천을 연결하는 지점에 세워질 것으로 알려짐. 4일 단둥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새 압록강 대교 건설 위치가 단둥의 하류로, 단둥시가 신개발구로 건설중인 랑터우로 사실상 확정됨.
-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압록강 대교 건설 지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단둥시 관계자들이 랑터우에 다리가 세워진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음. 최근 랑터우 압록강변에 세워진 개발구 건설 조감도에도 랑터우와 신의주 남쪽에 위치한 용천을 잇는 구간을 압록강 대교 건설 예정지로 표기돼 있음.
- 북한은 2007년 중국이 제의한 압록강 대교 건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랑터우에 세우자는 중국의 요구와는 달리 단둥과 신의주 상류인 위화도 부근에 세울 것을 고집해왔음.
- 이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압록강 대교 건설은 지난 10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때 북한이 전격 합의, 압록강 대교 건설 비용 전액을 중국 측이 부담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지점을 북한이 양보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랑터우가 유력한 입지로 거론돼왔음.

● 北, 풍력에너지 개발에 관심(12/4, 조선신보)

-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조선신보는 4일 “현재 조선에서는 풍력에너지 개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와 독일교회개발봉사 그리고 중국의 풍력에너지 설비협회 등이 연계 대상”이라고 소개



- 북한은 또 올해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3차 국제풍력에너지전시회에 대표단을 파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및 중국 전문가들과 소형 풍력발전기 생산, 인력양성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언
- 조선신보는 “지금 국내의 해당 부문에서는 풍력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풍력발전의 본보기 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밀고 나가고 있다”고 소개, 북한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촌에너지와 깨끗한 환경본보기 창조를 위한 대상계획’사업도 풍력에너지 이용과 연관돼 있음.
- 이 사업은 평양 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2003년 10월 환경보호와 에너지 개발, 정보기술(IT)·원예·유기농 부문의 국제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이 센터는 2005년 세계풍력에너지협회와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 가입했고, 2006년 1월에는 ‘지속개발을 위한 세계에너지네트워크’(GNESD)의 일원이 됐음.
- 조선신보는 “앞으로도 조선측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과 그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유럽의 대학, 전문기관, 기업 등과 교류, 연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

● 북한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심(2009년 11월호, 천리마)

- ‘천리마’ 11월호는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저탄소 경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탄소 경제의 개념과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필요성을 강조, 이 잡지는 먼저 저탄소 경제를 “한마디로 말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최소화하는 경제”라고 정의
- 잡지는 이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공장이 많이 건설되고 새로운 공업 부분이 끊임없이 생겨남에 따라 자연환경이 파괴되며 육지의 사막화, 지구 온난화 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

● 北, 유엔 두만강 개발계획 탈퇴(12/2, NHK방송)

-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 3국 국경개발계획에서 탈퇴했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2일 보도, UNDP가 추진하고 있는 북·중·러 3국 국경개발개발계획은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공단 등을 개발하는 ‘두만강 개발계획’임.
- 두만강 유역은 북·중·러 3국과 한국·몽골을 포함한 5개국이 17년전부터 공동 개발계획을 추진해왔음. 특히 중국은 이 계획에 대해 다양한 구체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음. 하지만 북한은 을초 이 개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고 방송은 전언
- 북한이 탈퇴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않고 있으나 두만강 유역 개발로 국경 지역에서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사상 통제와 주민 통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부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음. 일각에서는 유엔이 북한의 지난 4월 로켓 발사와 5월의 핵실험과 관련 제재를 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 **北고려호텔 앞 음식점거리 리모델링 마쳐(12/2, 조선중앙통신)**

- 평양 고려호텔 앞 창광 음식점거리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1일 영업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통신은 “본래의 건축형식을 살리면서 인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매개 식당의 특성에 맞게 개건된 거리는 그 주변의 고층건물, 살림집(주택)과 한데 어울려 경쾌하고 세련된 감을 준다”고 소개, “이번에 최신 주방설비와 집기류, 봉사비품들을 갖췄고 내외부 불장식도 잘 해놓았다”고 강조

라. 군사 관련

● **北통신, 南 군사훈련 맹비난(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남한군이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
- 통신은 이날 ‘군사소식통’을 인용, “11월 30일부터 ‘쌍룡’부대가 춘천과 화천일대를 작전무대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진입”했으며 “11월 27일 파주시 문산에서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20여 문의 105mm포를 기동”시켰다면서 “최전연(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남조선 괴뢰군 호전관들의 북침 연습은 자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
- 통신은 비난에서 지난 8월 하순 대남비난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괴뢰군 무장악당”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中고전 ‘홍루몽’ 영화로 제작(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조(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가극으로 만들었던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을 영화로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통신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예술영화 홍루몽 제1·2부를 만들어 내놓았다”며 “피바다가극단이 조·중 친선의 해인 올해 중국의 유명한 소설을 각색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재창조한 가극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

● **평양시내 비교적 평온(12/6,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 직후 대북지원 사업 모니터링차 평양을 방문했던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5일 “평양 시내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고 전언
- 이 단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환전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며 방



북 기간인 지난 3, 4일 자신들이 묵은 “양각도호텔 내부에서뿐 아니라 바깥 식당과 매대 선물코너에서도 이전에 하던 것처럼 유로화와 달러화·위안화를 그대로 썼다”고 소개

- 북한의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은 화폐개혁과 관련해 12월 4일 조선신보와 회견에서 앞으로 취할 새로운 조치에 언급, “앞으로는 일체 상점, 식당 등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조선돈으로 교환하여 쓰게 되어있다. 인차(곧) 그렇게 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음.

● 북한서 어린이 오리털옷 인기(12/4, 조선신보)

- 가볍고 따뜻한 오리털로 만든 어린이옷이 무거운 목화솜옷 일색인 북한에서 호평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4일 평양지국발로 보도
- 신문은 ‘환영받는 어린이용 오리털솜옷’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수봉화 피복공장이 만든 오리털옷을 소개, 신문은 “문수봉화 피복공장은 원래 계절별 여성옷을 질 높고 제작하는 것으로 이름났다”며 “이번에는 뛰어난 감성의 과녁을 어린이들에게 맞췄다”고 소개, “새 제품은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높으며 몸매와 얼굴을 귀엽게 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

● 북한 신의주에 신종플루 유행 주장(12/4, 연합뉴스)

- ‘좋은벗들’은 3일 소식지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신종 독감이 돌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힘. 이 단체는 신형 독감이 돼지 바이러스에서 발생한 독감이라고 보도. 신종 플루가 애초 돼지 독감(swine flu)으로도 불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의주에 돌고 있는 신종 독감은 신종 플루인 것으로 추정됨.
- 이 단체는 “일반 감기처럼 시작해 기침이 심해지고, 발열 현상에 빠마다가 쑤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단행된 화폐 교환으로 약조차 살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언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신종 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다. WHO의 니키 알렉산더 공보관은 “아직 환자 발생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북한을 담당하는 지역 사무소의 전문가들에게 사실을 확인토록 지시했다”고 밝힘.
- 세계보건기구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미국을 비롯한 선진 9개국이 비축한 백신을 필요한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에도 이르면 연내에 처음으로 신종플루 백신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 **北만수대창작사, 호주 아·태미술전 출품(1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최고의 미술가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호주 브리즈번 소재 국립미술관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5일 개막하는 '제6회 아시아·태평양 현대미술 트리엔날레'에 회화와 조각 등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퀸즐랜드 아트갤러리의 아밀리에 군델라크 공보관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 단체로 알려진 만수대창작사가 내년 4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 회화와 조각, 포스터 등 현대 미술 작품을 다수 출품했다"고 밝힘.
 - 이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은 만수대창작사 작가는 강재원, 황인재, 김영강, 조영선, 장희로, 임혁, 채장호, 오성규, 김형일, 김기철 10명임.
 - 군델라크 공보관은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건물 외벽을 다시 칠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조영선 작가의 회화 '건설장'을 비롯해 학교와 극장의 보수 공사 장면을 묘사한 그림 등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담은 작품도 다수 선보인다"고 소개

- **北, 역사유적 보수·복원(12/3, 조선중앙통신)**

 - 올해 가을에 북한 각지에서 대대적인 유적 보수·복원 공사가 이뤄져 태백산성(황해북도 평산군 소재) 등 7개의 옛성이 원상복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통신은 "올해 가을철에만 전국적으로 7개의 옛성과 70여기의 무덤이 원상 복구되고 1천170여개소의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유적건물 대보수와 문화보존시설물 설치가 끝났다"고 전언
 - 통신은 보수·복원 공사가 끝난 곳으로 황해북도 평산군 공룡발자리(발자국) 화석 보존관, 연탄군 심원사 보광전, 강원도 금강군 불지암, 함경남도 북청군 광제사 대웅전, 영광군 불지암 등을 소개

- **北 화폐교환 저조, 주민들 저항 표현(12/3, 연합뉴스)**

 - 북한에서 지난 1일부터 새 화폐 교환이 시작됐으나 화폐 개혁 조치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주민들이 교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군 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대폭 강화, 북한 내부에 긴장감이 도는 것으로 알려짐.
 - 3일 신의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지역 북한 무역상과 대북 무역상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새 화폐 교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갑작스런 조치에 충격과 허탈감에 빠진 상당수 주민이 교환을 꺼리고 있음.
 - 대북 무역상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지만 어렵게 벌어들인 돈 상당액이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당국의 조치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6일 이후에는 구권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환전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선 중앙은행 저금소들이 한산한 모습"이라고 전언



- 반면 뒷거래를 통해 환전 규모를 늘리려는 주민들이 줄을 대기 위해 인간힘을 쓰면서 은행 직원들의 ‘몸값’은 치솟았음. 북한 당국은 또 새 화폐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의주 등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
- 한 북한 무역상은 “북한 화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이전에는 별다른 통제가 없었다”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자 새 화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변경 무역상들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신의주 세관에는 긴장감마저 들고 있다”고 설명

● **북한, 동아시아게임에 7개종목 76명 파견(12/2, 연합뉴스)**

- 5일 개막하는 2009홍콩동아시아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규모가 드러났음. 홍콩동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육상과 다이빙, 축구, 유도, 조정, 역도, 조정 등 7개 종목에 선수 76명을 출전시키는 것으로 확인해줌. 감독과 코치, 본부임원을 합하더라도 1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 같은 규모는 4년 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당시 11개 종목 선수와 임원 150명보다 대폭 축소된 인원임.

● **北,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행사에 참가한 북한 내각과 중앙기관, 근로단체 일꾼(간부)과 북한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요원들은 ‘우리나라(북한)에서 에이즈 예방통제 활동’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은 뒤 녹화편집물 ‘에이즈에 대하여’를 감상했다고 통신은 전함
- 리봉훈 보건성 부상은 연설을 통해 북한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감시, 통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에이즈 예방사업에 계속 국가적인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언급

● **北 평양민속공원에 역사유물 모형물 설치(11/30,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평양 대성산 기슭에 조성 중인 평양민속공원에 고구려 시기의 불상을 비롯해 안중근 열사와 서예가 김정희의 글씨체 등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유적, 유물 모형물이 들어선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신문은 “지금 공원 건설과 더불어 공원에 설치할 역사 유적의 모형 창작이 한창”이라며 “고구려 시기의 불상 조각을 비롯해 촛대, 향로, 향합, 시주함, 목탁, 벽화, 광배를 비롯한 역사 유적, 유물들이 실물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단군, 고주몽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은 물론 “고국원왕 무덤벽화(250㎡)의 모사품도 웅장하게 형상되고 있다”며 특히 “금동불상의 모형 제작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전함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문타폰 유엔보고관, 北인권엔 관심 가져야(12/4, 연합뉴스)

- 비딧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오는 7일 실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탈북자, 강제수용소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홈페이지에 지난 1일자로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 탈북자 인권, 감옥 등 수용시설 현대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감독 하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망명지나 피난처를 찾아 탈북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제재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힘. 또 누구나 인도주의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현대화하는 것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유엔 특별보고관 및 관련 위원회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북한의 실효성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

● 美 골드버그, 北은행·기업 WMD 확산조장(12/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총괄해온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 후보자가 “북한의 국영은행과 기업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
- 골드버그 후보자는 이날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정보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금융 조직은 주로 정부 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들이 종종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확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언
- 그는 대북 제재 조정관으로 일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금지된 군수물자 선적을 막고 금융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회고

나. 북·미 관계

● 조선신보, 보즈워스 방북 핵심의제는 ‘평화’(12/5, 조선신보)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조선신보는 5일 이번 북미 양자대화에서 “평화”는 마땅히 외면할 수 없는 주제”라고 강조



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오는 8일 평양에 도착, 북한 당국자와 만나 6자회담 재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

- 토너 부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가 평양체류중 접촉할 북측 당국자에 대해 “격에 걸맞은 고위 인사”라고만 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음. 보즈워스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두텁고 핵 협상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 그는 ‘보즈워스 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가능성’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변, 토너 부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 등은 평양방문 이후 10일 서울, 11일 베이징, 12일 도쿄, 13일 모스크바 등을 차례로 방문해 후속 협의를 하고 15일 워싱턴 DC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앞서 주말인 오는 5일 워싱턴 DC를 출발, 6일 오후 서울에 도착해 한국 당국자들과 방북 사전협의를 마친 후 8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특별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임.
 - 토너 부대변인은 “방북 대표단에는 성 김 6자회담 대사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당국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 국무부 당국자는 “보즈워스 대표, 성 김 대사를 포함해 국무부 3명, NSC 1명, 국방부 1명 등 모두 5명으로 대표단이 구성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 대표단에는 대니얼 러셀 NSC 아태담당 보좌관, 데릭 미첼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北 고위관리, 美에 평화조약 체결 요구(12/3,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11월 하순 방북한 미국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에게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북·미 협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3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은 11월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 조약 체결과 북한에 대한 투자를 요청, 리근 국장은 특히 프리처드 소장 등에게 “미국이 항구적인 평화 조약 체결을 확약하면 핵폐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고 신문은 소개
 - **美대사, 보즈워스 방북은 6자틀 안에서(12/3, 연합뉴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6자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
 -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방북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밝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방북의 목적”이라며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의 검증 가



능한 비핵화 추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설명

- 그는 특히 “우리는 6자회담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최고의 기구라는 데 대한 신념도 확실하다”며 “한국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계국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
-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그는 “평화체제든 조약이든 협정이든 이 문제를 말할 때 한미동맹은 항상 논의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열외로, 이는 변하지 않는 확약”이라며 한국이 반드시 포함될 것임을 시사
- 북한이 최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화폐개혁에 대해선 “북한에서 무슨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다 고 하니) 안타깝다”고 언급

● 조선신보, 북·미간 최대 현안은 평화체제 수립(12/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비핵화 첫 절차는 평화보장체제 수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북)·미 회담에 임하는 조선측의 최대 관심사는 항상 평화이며 그 외의 잡다한 문제는 주된 의제로 상정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미 양자대화의 최대 현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고 주장
- 신문은 “교전국들 사이의 관계 문제는 철두철미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풀린다”며 북미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주장, 신문은 특히 ‘대청해전’을 거론하면서 “북남간의 무장충돌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재확인케 했다”며 “우발적인 충돌과 전쟁재발의 우려가 있는 한 조선측이 자위적 억제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일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음.
- 또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인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 “미국이 조선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실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평화보장 체제의 수립이 근선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보즈워스, 北에 연락사무소 제기할 수도(12/1, 자유아시아방송)

- 오는 8일 방북하는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이 방송은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를 인용, “현재 오바마 행정부 내에 북한에 연락사무소나 이익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즈워스가 연락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하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닉시 박사는 “미국은 지난 90년대부터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 했다”며 “2007년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북측에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언급



● 디트라니, WMD확산저지 새 임무맡아(12/1, 연합)

-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 특사를 지냈던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 DNI산하 국가확산대책센터(NCPC) 소장에 임명됨.
- 블레어 소장은 “디트라니 담당관은 30년 이상 국가정보 및 외교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고, 특히 2006년 신설된 DNI의 북한담당관실을 이끌면서 유능하게 일해왔다”고 평가- 디트라니 신임 NCPC 소장은 앞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맞선 통합적인 전략과 조치를 개발하는 동시에 WMD 확산을 예측,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맡게 됨.

다. 북·중 관계

● 中, 북·미대화서 6자회담 일정 기대(12/1, 연합)

- 중국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시기를 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에서 6자회담 복귀시기를 밝힐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현재로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이 보도가 사실이면 희망한다”며 강한 기대감을 표명
- 친 대변인은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지난 10월 방북했을 때 북한이 6자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6자회담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고 평가
- 그는 “북·미 양자 대화는 6자회담 진전의 일부분이고 6자회담 틀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은 북·미 대화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언급
- 친 대변인은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이 줄기차게 힘써 추진해온 목표”라고 강조

● 中, 화폐개혁은 北내정, 논평않겠다(12/1, 연합)

-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30일자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과 관련, 북한의 내정이라면서 공식 논평을 거부,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북한이 어떤 화폐를 사용하든 간에 이는 북한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변
- 친 대변인은 이번 화폐개혁이 북·중 경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말에도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서 과거와 다름 없이 평등, 상생의 원칙하에서 북한과 경제무역, 교역을 유지하고 발



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답변

- 신화통신은 1일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외국공관들에 대해 기존 화폐 사용을 중단하니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해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음을 사실상 확인됨.

● 北최태복, 中 전인대 부위원장 만나(11/30,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예방해온 천즈리(陳至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전인대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담화에는 북한측에서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성자립 조(북)·중 친선의원단 위원장이, 중국측에서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 등이 각각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언
- 통신은 중국 전인대 대표단이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라. 북·러 관계

● 러 상원의장, 北 6자회담 복귀 준비 안 돼(12/2,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세르게이 미로노프 의장은 2일 북한 지도부는 아직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힘. 11월 25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미로노프 상원의장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
- 그는 또 “북한 지도부와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전에 없이 강경한 어조였다”며 “이런 태도는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없었다”고 소개

마. 북·일 관계

● 북한, 美·日 ‘후텐마 갈등’ 관심(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미군기지 이설(전)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후텐마 비행장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갈등상을 보도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언
- 신문은 “일본은 오래전 약속한 후텐마 미군기지 이설을 질질 끌고 있고 미국은 이를 매우 언짢게 여기면서 빨리 약속을 지키라고 압력을 틀어박고 있다”고 보도, 신문은 원안대로 후텐마 기지를 이전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기지로 전략해 미국의 군사통제에 더 깊숙이 빠져들게 돼 여기서 벗어나 독자적 군사행동을 하려는 것이 일본의 진정한 속내라고 분석
-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그냥 내버려두면 종당에는 미국의 군



사적 경쟁자, 위협세력으로 될 수 있다”며 “일본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이곳을 대조선, 대아시아전략 실현의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후텐마 기지 등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미일의 줄다리기 속에서 추진된다고 해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미일 모순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 **日경찰, 北에 화장품 등 수출한 2명 체포(12/1, 연합뉴스)**

- 일본 경찰은 북한에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수출, 대북 교역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일본인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힘. 경찰에 따르면 수출업체 간부인 나가니시 노리코(62)와 동료 이케야마 마사키(73)는 지난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화장품을 수출한 데 이어 올 8월 의류와 식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그러나 수출업체의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음. 일본은 북한 집권층을 겨냥, 2006년부터 쇠고기, 캐비아(상어알) 등 사치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北신문,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 비난(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주제넘게 놀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해 “푼수 없는 짓”이라고 주장, 이 신문은 “일본은 지금까지 저들의 과거죄행에 대해 성근한(성실한) 반성도, 응당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유엔을 분열시키고 국제무대에서 군국주의의 새로운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일로 될 것”이라며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데서 일본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첫 대상”이라고 주장

3. 대남정세

● **남북 공동시찰 대상 中·베트남 공단 결정(12/3, 연합뉴스)**

- 남북이 12월 중순 공동으로 시찰할 해외공단이 중국의 칭다오와 선전, 베트남의 엔퐁 산업단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3일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단은 오는 12일부터 열흘간 중국의 칭다오와 선전, 베트남의 엔퐁 산업단지를 둘러볼 예정”이라며 “이들은 시찰활동 중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와 임금, 근로 조건 등에 대해 폭넓게 의논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 소식통은 그러나 막판 조율 단계에서 시찰 대상 공단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언
- 시찰단의 단장은 지난 6~7월 세 차례 진행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가 맡게 된 것



으로 전해짐. 한편, 공동시찰을 위한 선발대가 중국과 베트남 현지 점검을 위해 2일 출국

● 서해상 구조 북한군 중사 北송환(12/2, 연합)

-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해군 함정에 구조된 북한군 중사가 2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 중사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과 북한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힘.
- 북한군 중사는 판문점 경비부대 대대장의 안내에 따라 MDL로 접근한 뒤 MDL을 넘어 북한군 장교의 뒤를 따라 아무런 행동이나 말없이 판문각으로 들어갔다고 이 관계자는 전언
- 앞서 12월 1일 유엔사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가 북한군 중사를 면담했으며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군 중사는 11월 29일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승어잡이 그물을 설치 중에 급류에 휘말려 표류하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인 연평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구조됐음.

● 대청해전으로 중단된 北모래반입 재개(12/2, 연합)

- 대청해전으로 중단됐던 우리 선박의 북한산 모래 채취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짐.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한산 모래 반입이 대청해전 발발 약 2주만인 11월 25일 재개됐다”며 “이후 동해 고성, 서해 해주 등에서 우리측 모래채취선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 당국자는 “업체들이 북측에 투자(대금지불)해놓고 투자한 만큼의 모래를 들여오지 못한 경우에 한해 모래채취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투자분 회수”가 끝난 뒤에도 계속 모래반입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
- 북한 해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측 모래채취선은 11월 10일 대청해전이 발발하자 자체 판단에 따라 11일 인천항을 통해 귀환했었음.

● 대북지원단체, 종자 공급 끊겨 北농업 타격(12/1, 연합)

- 정부의 대북 물자반출 제한으로 옥수수 등의 종자 지원까지 끊겨 농업 분야 협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대북지원단체들이 주장, 이들 단체는 의약품과 취약계층 긴급구호 식량의 반출을 허용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만성적 식량난 완화에 도움이 되는 종자와 농자재 반출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 상원의장 “北 6자회담 복귀 준비 안 돼”(12/3)

-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세르게이 미로노프 의장은 2일 북한 지도부는 아직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힘. 지난달 25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미로노프 상원의장은 이날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함.
- 그는 또 “북한 지도부와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전에 없이 강경한 어조였다”며 “이런 태도는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함.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없었다”고 덧붙였음.
- 미로노프 의장은 이번 방북 기간에 북한의 김영일 내각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북한 핵 문제는 협상과 다자 회담의 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러시아 당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미로노프 의장은 자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러시아 언론에 밝힘. 그러나 북한 언론은 그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에게 주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을 뿐 친서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미로노프 의장은 지난 2004년 9월 방북했을 때에는 김 위원장을 예방,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자신이 준비한 선물도 줌.

나. 미·북 관계

● “美노벨상 과학자 北김책공대서 강연”<RFA>(12/5)

- 200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그리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회장이 다음주 방북해 북한의 대표적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북한 과학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함.
- 방송은 AAAS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아그리 회장이 이끄는 미국 과학자 대표단이 다음주 중반 “미국과 북한간 과학분야의 연구협력과 학술교류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해 북한 관리와 과학자를 두루 면담하고 오는 16일을 전후해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힘.



- 방북단 관계자는 이번 과학자들의 방북이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이라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8일~10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함.
- 이 컨소시엄은 시라큐스대와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워싱턴에 있는 미국민간연구개발재단이 주축이 돼 지난 2007년 5월 구성됐으며, 그동안 미 시라큐스대와 북한 김책공대간 교류가 꾸준히 이뤄져 왔음.
- 이 컨소시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미 과학자들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으며, 이번 미 과학자 대표단의 방북은 지난 2002년과 2004년 각각 20여 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김책공대를 방문한 이후 “첫 중량급 과학자들의 방북 실현”이라고 RFA는 덧붙였음.

● 문타폰 유엔보고관 “北인권엔 관심 가져야”(12/4)

- 비릿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오는 7일 실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탈북자, 강제수용소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함.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홈페이지에 지난 1일자로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 탈북자 인권, 감옥 등 수용시설 현대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감독 하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망명지나 피난처를 찾아 탈북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제재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 누구나 인도주의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유엔 특별보고관 및 관련 위원회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북한의 실효성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매년 유엔 본회의와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에 대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당국과 국제사회가 시의적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함.
-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국제사회의 인권과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北 고위관리, 美에 평화조약 체결 요구”(12/3)

- 북한이 지난달 하순 방북한 미국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에게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북·미 협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은 지난달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 조약 체결과 북한에 대한 투자를 요청함. 리근 국장은 특히 프리처드 소장 등에게 “미국이 항구적인 평화 조약 체결을 확실하면 핵폐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美대사 “보즈워스 방북은 6자 틀 안에서”(12/3)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6자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함.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의 방북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밝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방북의 목적”이라며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추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함. 그는 특히 “우리는 6자회담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최고의 기구라는 데 대한 신념도 확실하다”며 “한국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계국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그는 “평화체제든 조약이든 협정이든 이 문제를 말할 때 한미동맹은 항상 논의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열외로, 이는 변하지 않는 확약”이라며 한국이 반드시 포함될 것임을 시사함.
-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문제는 미국 혼자 짊어질 부담이 아니라고 말했듯이 43개국이 국제치안 유지군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도 경비병력 확장 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들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역량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미국의 아프간 증파 발표와 관련 “이런 발표가 한국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국제치안군과 세부사안을 논의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맞춰 계획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그는 “한미 FTA가 양국 간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전략적 동맹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 “최근의 전례없는 경제위기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큰 혼란



을 겪었고 어떤 기업은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됐다”며 “앞으로 진전을 위한 길을 찾고자 한다”고 밝힘.

- 스티븐스 대사는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이 굳이 안해도 됐지만 리더로서 선택을 한 것”이라며 “내년 한국이 주재할 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함. 북한이 최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화폐개혁에 대해선 “북한에서 무슨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함.

● “평화협정 전환이 北의 주요관심사” <美전문가>(12/3)

- 최근 북한에 다녀온 미국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북한의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스나이더 소장은 지난달 말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등을 만남. 그는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북측이 말했다”며 “또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를 맞아 주인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리근 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원자바오 총리에게 한 얘기를 반복했다”며 “보즈워스 특사가 방북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서 다자회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번에 평양에 가 느낀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인식차가 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1순위 과제로 꼽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특히 초기 단계에서 비핵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북한의 무역성 관리들이 미국의 대북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대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했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과 임금 등에서 각종 혜택을 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임. 2002년 이후 7년만에 방북한 스나이더 소장은 최근 평양의 변화상에 대해 “150일 전투가 끝나서 그런지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유경호텔도 외벽을 단장한 것을 볼 수 있었고 평양의 전력 사정도 과거에 비해 크게 좋아진 것 같다”고 전함.

● 美정보국 부국장 “北붕괴 동향 파악 중요 임무”(12/2)

-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데이비드 고펜트 부국장이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 파악이 정보기관의 주요 대북 임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고펜트 부국장은 지



난 9월 29일 의회 인준을 받기 위해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RFA는 전함.

- 그는 답변서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주요 대북 임무가 북한 정권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과 북한 집권층의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또 북한을 ‘잠재적으로 무모한 정권(potentially reckless regime)’이라고 지칭하면서 “핵기술과 미사일의 은밀한 판매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의회 인준을 거쳐 지난달 11일 취임한 고퍼트 부국장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2인자로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을 보좌해 각 정보기관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고 있음.

○ “北, 매년 10억弗 받으면 핵개발 보류할 것”(12/1)

-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중동 평화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면서도 해결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안들임. 분석 모델로 각광받았던 게임 이론을 적용해 이들 문제의 해결 전망을 가늠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임이론가 메스키타 뉴욕대 교수는 이 문제들에 대한 예상을 거침없이 내어놓음.
- 북한은 해마다 10억달러 정도의 보상을 받으면 핵무기 개발을 보류할 것이고 이란은 결국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이며 중동 평화는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것임. 사실 메스키타 교수는 수십년이나 CIA와 미 국방부를 위해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문제들에 대한 예상을 내놓았음.
- 이미 40여년 전 부터 게임이론의 예측 모델을 통해 국제정세를 예상하는 작업을 해온 그는 “정치문제를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나나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고 말함. 하지만 국제정치 문제에 대한 그의 게임이론 예측 모델은 그 유용성과 관련해 지금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
- 그가 지금까지 해온 예측 작업에 대해 CIA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CIA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메스키타 교수의 “폴리곤” 모델을 30여개 나라에 적용해 정세를 예상함. CIA는 최근 비밀 해제된 보고서에서 이 모델의 예측 정확성이 전통적인 분석 방식에 비해 두배나 높았다고 밝힘.
- CIA는 또 두 가지 분석 방법을 다 합하면 예측 정확성이 90%에 달했다고 보고함. 지금도 뜨거운 국제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메스키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도록 설득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오직 한가지만을 따져야 한다고 말함.
- “얼마 정도의 ‘원조’가 북한에 건네져야 북한 지도부가 합의를 지키도록 하는 뇌물이 될 수 있느냐”는 것. 그는 “내 모델은 매년 10억달러~2억달러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함.
-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함. “다만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무기급 연료를 개발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예측임.

- 중동 평화 문제는 또 어떤가.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말 즈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진지한 평화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앞으로 3년후 즈음이면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가 교체돼야 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 것이 그의 전망임.
- 메스키타 교수는 그러나 이번달 코펜하겐 회의에서 새 기후변화협약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았음. 그는 설사 타협이 이뤄진다해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오히려 이런 협약보다는 녹색기술 시장을 독점하려는 경쟁 때문에 지구가 파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예상임.

● <디트라니, WMD확산저지 새 임무맡아>(12/1)

-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 특사를 지냈던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 DNI산하 국가확산대책센터(NCPC) 소장에 임명됨.
- 데니스 블레어 DNI 소장은 30일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일을 맡아온 디트라니 담당관을 케네스 브릴 현 NCPC 소장 후임에 임명함. 브릴 소장은 국무부로 복귀한 뒤 은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블레어 소장은 “디트라니 담당관은 30년 이상 국가정보 및 외교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고, 특히 2006년 신설된 DNI의 북한담당관실을 이끌면서 유능하게 일해왔다”고 평가함. 디트라니 신임 NCPC 소장은 앞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맞선 통합적인 전략과 조치를 개발하는 동시에 WMD 확산을 예측,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맡게 됨.
- 디트라니는 미중앙정보국(CIA)에서 극동담당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정보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지난 8월 미국인 여기자 석방을 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막후에서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디트라니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DNI의 북한담당관에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정보수집 담당 부국장보를 맡아온 실비아 코플랜드가 임명됨.

다. 중·북 관계

● 압록강 대교, 단둥 하류 건설 유력(12/4)

-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압록강 대교가 단둥 하류인 랑터우(浪頭)와 평안북도 용천을 연결하는 지점에 세워질 것으로 알려짐. 4일 단둥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새 압록강 대교 건설 위치가 단동의 하류로, 단동시가 신개발구로 건설중인 랑터우로 사실상 확정됨.

-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압록강 대교 건설 지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단동시 관계자들이 랑터우에 다리가 세워진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 최근 랑터우 압록강변에 세워진 개발구 건설 조감도에도 랑터우와 신의주 남쪽에 위치한 용천을 잇는 구간을 압록강 대교 건설 예정지로 표기돼 있음.
- 단동시는 2007년 한국에서 랑터우 개발구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 때도 이곳에 압록강 대교가 건설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단동시가 신청사를 건립, 이전할 계획이고 고층 아파트와 첨단산업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랑터우 개발구는 이미 기반도로 조성이 끝난 가운데 고층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임.
- 일부 아파트는 이미 20층 이상까지 올라감. 아파트 시공업체들은 이 일대에 압록강 대교가 세워져 신의주와 연결될 예정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랑터우 개발과 함께 압록강 대교 건설로 북·중 교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일대 부동산 가격도 경풍 뒤흔음. 5만 위안 안팎에 거래되던 개발구 주변 낡은 가옥들은 호가가 10배 이상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2007년 중국이 제의한 압록강 대교 건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랑터우에 세우자는 중국의 요구와는 달리 단동과 신의주 상류인 위화도 부근에 세울 것을 고집해옴. 이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압록강 대교 건설은 지난 10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때 북한이 전격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탐.
- 압록강 대교 건설 비용 전액을 중국 측이 부담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지점을 북한이 양보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랑터우가 유력한 입지로 거론돼옴.
- 이에 앞서 중국 현지 언론들은 지난 10월 중국 당국이 내년 8월 압록강 대교 착공을 목표로 설계도 제작 등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달 초에는 류샤오밍(劉曉明) 주북한 중국대사가 단동을 방문, 단동 당·정 관계자들과 압록강 대교 건설을 비롯한 북·중 교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함.

● 中 “화폐개혁은 北 내정..논평않겠다”(12/1)

-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30일자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과 관련, 북한의 내정이라면서 공식 논평을 거부함.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북한이 어떤 화폐를 사용하든 간에 이는 북한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함.
- 친 대변인은 이번 화폐개혁이 북·중 경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를 묻는 말에도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서 과거와 다름 없이 평등, 상생의 원칙 하에서 북한과 경제무역, 교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답변함.

- 북한은 30일자로 교환비율을 100대1로 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신화통신은 1일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외국공관들에 대해 기존 화폐 사용을 중단하니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해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음을 사실상 확인함.

라. 일·북 관계

● 日경찰, 北에 화장품 등 수출한 2명 체포(12/1)

- 일본 경찰은 북한에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수출, 대북 교역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일본인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힘. 경찰에 따르면 수출업체 간부인 나가니시 노리코(62)와 동료 이케야마 마사키(73)는 지난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화장품을 수출한 데 이어 올 8월 의류와 식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그러나 수출업체의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음. 일본은 북한 집권층을 겨냥, 2006년부터 쇠고기, 캐비아(상어알) 등 사치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마. 기타

● “北 화폐개혁은 기업가계급 견제용”<美전문가>(12/3)

- 북한 당국이 이번 주 전격 단행한 화폐 개혁은 북한 내에서 시장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기업가 계급이 흥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분석함.
- 북한경제 전문가인 그는 2일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에 <김정일의 가짜 화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최근년 터키와 가나가 과거 경제정책상의 실패와 단절하기 위해 단행한 ‘좋은’ 화폐 개혁과 북한의 이번 ‘나쁜’ 화폐 개혁을 비교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터키와 가나에선 모든 국민이 옛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바꾸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은 교환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교환하지 못한 돈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은 1948년 수립 이래 10여 년마다 주기적으로 화폐개혁이나 유사조치를 통해 민간분야 기업가들의 저축과 운영자본을 몰수해왔다고 상기시킴.
- 북한 내에서 자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공장에서 이탈한 노동자에서부터 직위를 이용해 곡물과 수입 중국산 소비재까지 모든 것을 사적으로 거래하는 정부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활동을 통해 태동한 기업가 계급이 부를 축적하게 되



면 잠재적으로 권력을 갖게 될 정도로 발전해 국가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설명함.

- 주민들이 집단으로 뭉치지 못하도록 원자화된 북한에서 민간분야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의 감시를 벗어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인 만큼, 몰락한 국가 경제 틀 밖에서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것에 북한 당국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임.
-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활동을 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 하나로 놀랜드 부소장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이뤄진 북한 형법 개정을 들고, 개정 형법은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 범문 그대로라면 일반적인 상거래 활동 모두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 형법이 “비법적인 상행위로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나 “비법적으로 돈이나 재화를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 등을 금지한 점 등을 예시함. 그는 또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른 법 위반자들에 비해 시장활동관련 법 위반자들의 구금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도 들었음. 놀랜드 부소장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을 하고 민간경제 부문을 탄압해도 시장을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함.

○ “北화폐개혁, 대외채무·교역에 영향없어” <RFA>(12/3)

- 영국의 금융중개회사 이그조틱스(Exotix Limited)의 스투어트 컬버하우스 수석경제분석가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대외채무관계나 교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3일 전함.
- 컬버하우스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빚은 주로 독일의 마르크나 스위스의 프랑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북한 화폐인 ‘원’이 어떻게 개혁을 했든 경화(hard currency)에 해당하는 채무 규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금까지도 영향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의 화폐개혁이 북한과 국제사회 간 무역에도 실질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이어 “화폐 개혁과 북한의 채권 간에도 큰 연관성이 없다”며 “여전히 북한 채권의 가격이 싼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소개함. 그는 외국 투자자들의 북한 채권 구매와 관련, “미국과 북한이 곧 양자대화를 한다 해도 6자회담의 재개나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확신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FA는 또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화폐개혁은 액면 가치의 변화에 불과하고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은 주로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화폐개혁이 북·중 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다”고 전함.



● “北, 유엔 두만강 개발계획 탈퇴”(12/2)

-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 3국 국경개발계획에서 탈퇴했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2일 보도함. UNDP가 추진하고 있는 북·중·러 3국 국경개발계획은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공단 등을 개발하는 ‘두만강 개발계획’임.
- 두만강 유역은 북·중·러 3국과 한국·몽골을 포함한 5개국이 17년전부터 공동 개발계획을 추진해왔음. 특히 중국은 이 계획에 대해 다양한 구체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옴.
- 하지만 북한은 올 초 이 개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고 방송은 전함. 북한이 탈퇴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두만강 유역 개발로 국경 지역에서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사상 통제와 주민 통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부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음.
- 일각에서는 유엔이 북한의 지난 4월 로켓 발사와 5월의 핵실험과 관련 제재를 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미·중 관계

● 中, 아프간 미군증강에 우회적 ‘환영’(12/3)

- 중국 정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강하기로 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명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주의깊게 지켜봤다”면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해 사실상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이 목표가 실현되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이 촉진되길 희망한다”면서 “관련 국가의 주권과 독립, 영토 안정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함.
- 친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최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보듯이 아프가니스탄의 테러행위에 반대하고 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음. 그는 “중·미 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문제에서 대화와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3만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중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증강되면 신장위구르자치구 분리독립세력의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탈레반 세력이 중국으로 넘



어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나. 미·일 관계

● 日외상 “후텐마합의 백지화시 美 신뢰 잃어”(12/6)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미·일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백지화되면, 신뢰 관계가 사라진다. 현재의 미·일 동맹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함.
- 6일 교도(共同)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전날 밤 오키나와 현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해 1996년 미·일 간 합의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에 대한 미국의 반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오카다 외상은 기자들에게 또 “(연내 결론은) 쉽지 않지만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해 하토야마 총리가 조기에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그러면서 그는 종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가테나(嘉手納) 기지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래 어려운 문제였다. 좁은 길이라고 말해 왔다”고 사실상 관철이 어려움을 시사함.
- 앞서 오카다 외상은 나고시 등을 찾아 민주당 지지층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후텐마 비행장의 오키나와현 이외로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오카다 외상은 “여러분의 생각은 알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다. 현행 합의를 백지화하면 (이전 자체가 어렵게 돼) 후텐마의 위험성이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하토야마 총리는 5일 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을 총리실로 불러서 해법을 논의함. 그는 회동 후 “시간적 문제도 포함해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미·일 관계는 중요하므로, 그것을 포함해(방위상과)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결론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 하토야마, 후텐마 새이전지 검토 지시(12/4)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4일 미·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종전 합의한 슈와브 기지 이외의 이전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가 최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에게 “새로운 이전지가 없는지 서둘러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정함.
- 그러면서 그는 “당연한 일이지만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에 있는 슈와브 기지로의 이전 방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혀 미·일 간 합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했음을 분



- 명히 함.
- 하토야마 총리는 또 “미·일 간 합의는 중요하다”며 “다른 (이전할) 지역이 없는지는 전부터 했던 말”이라며 “(중전 합의 준수 시 연립 정권 이탈 방침을 표명한) 사민당의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카다 외상 등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 검증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함.
 - 그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연내에 도출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와 관련, “시간을 두고 미국과 협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연내 결론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는 민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사민당이 미국과의 중전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선 점을 고려,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연립 여당 간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연립정권의 한 축인 국민신당도 연내에 결론을 내는 데 반대하는 입장임.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비행장의 꿈 이전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안이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며 “꿈에 모두를 이전하는 것이 미국에 의한 억지력을 생각할 때,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함.
 - 이와 관련, 기타자와 방위상은 “모든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꿈을 방문할 방침이라고 말함. 그러나 그는 꿈으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암중모색인 상황”이라고 답함. 오카다 외상은 기자들과 만나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는데 대해 “후텐마와 관련, 위험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외상으로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함.
 -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상은 지난 3일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의 간사장이 참가하는 ‘정부 여당 당수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 이 회의는 내년으로 결론을 미루는 것을 전제로 대미관계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관측됨. 히라노 관방상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후텐마 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비용은 일단 계상하기로 했다고 밝힘.
 - 그러나 이러한 하토야마 총리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연내 결론 도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미국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하토야마 총리는 3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일 간 중전 합의에 반대하는 사민당의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론은 서둘러야 하지만 연내에 결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2014년까지 후텐마 비행장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한 미·일 간 합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유연성을 갖고 임할 수 있다”



고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오카다 외상과 기타자와 방위상은 4일 오후 외무성에서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 등과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美 아프간 신전략서 日 소외>(12/3)

-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신전략 수립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왕따’를 당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음.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프간 신전략을 발표하기 직전 아프간의 국제치안지원부대(ISAF)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외에 인도, 러시아의 정상과 전화협의를 했으나 하토야마 총리는 배제됐다”고 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미·일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는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영향이 큰 것 아니냐”고 지적함. 산케이신문도 “일본은 미국의 신전략에 대해 처음엔 몰랐으며 11월 26일 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신전략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함.
-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카다 외상이 전화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다”고 강조함.
-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아프간에 50억 달러의 민생 지원을 하기로 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ISAF의 활동을 지원하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를 계속하는 등 인적공헌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함.
-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오바마 대통령은 43개 동맹국에 파병 협조를 요청했지만 헌법상의 이유로 ISA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민생지원에 중점을 둔 일본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일본 정부는 미국의 아프간 신전략으로 일본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미국이) 새로운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힘. 하지만 일본은 내년 1월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며 이미 밝힌 아프간에 대한 향후 5년간 50억 달러의 민생지원 방안 외에 다른 지원은 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

● 日 외무성 前국장 “오키나와 밀약 서명”(12/2)

- 일본 외무성의 한 전직 국장이 미국의 오키나와(沖繩) 반환 당시 원상회복 보상비를 일본이 부담한다는 밀약에 서명했다고 증언했다고 현지언론이 2일 보도함.
- 이는 일본의 전 정권인 자민당 정부가 밀약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오키나와 반환 협상의 실무 책임자가 밀약의 존재를 법정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일본 외무성의 전 아메리카 국장인 요시노 분로쿠(吉野文六)씨(91)는 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당시의 ‘밀약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미·일 간에 밀약이 있으며 자신이 직접 서명했다고 증언함.
- 요시노씨는 오키나와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일본이 미국에 지불한 3억2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없는 일종의 ‘선수금’이었다고 말함. 그는 일본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토지원상복구비 400만 달러와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계국의 해외이전비 1천600만 달러 등을 총액에 포함시켜 일본이 부담하기로 밀약했다고 밝혔음.
- 요시노씨는 “밀약이 있었다는 미국의 공문서가 계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일본 정부가)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과거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일본의 장래에도 유익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역사를 망각하거나 왜곡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다. 미·러 관계

● 美 “START-1, 후속협상 타결때까지 연장”(12/5)

-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만료를 하루 앞둔 4일 이 협정의 시한을 이를 대체할 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함.
- 기브스 대변인은 스위스에서 진행중인 START 후속협상과 관련, “앞으로 24시간 계속해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남아 있는 모든 현안이 24시간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함. 하지만 후속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음.
-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새 협정은 군축과 비확산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며 국제 안보 강화라는 양국의 공통 목표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외무부의 한 소식통도 이타르타스와 인터뷰에서 “양국이 협정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한이 지나고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며 내주까지 협상이 열릴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함. 관측통들은 지난 10월에 이어 오는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양국 차관급 비확산·군축 실무 회의에서 후속 협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러시아, 오바마의 아프간 전략 ‘지지’(12/3)

- 러시아 정부는 3만 명 병력 증파 등을 내용으로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新)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3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아프간 전략의 주요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환영을 표시함.
- 특히 외무부는 “아프간 국민과 대통령, 정부는 그들이 직면한 시련과 도전에 정면으로 부딪쳐야 할 것”이라며 “이 점에서 (2011년 7월에) 미군이 아프간 당국에 안보 책임을 넘기겠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함.
-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아프간으로 가는 의약품 등 비(非)군수물자의 자국 육로 개방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7월 미국 정부와 자국 영공을 통한 병력·물자·무기의 수송에 합의함.
- 미국은 러시아의 협조로 연간 4천500편의 항공기를 러시아 영공을 통해 아프간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억3천300만 달러(한화 약 1천551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전략 구상 발표 직전인 지난달 30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간 안정화를 위한 러시아 측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라. 기타

● **李대통령, 17일 코펜하겐 방문(12/6)**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2박3일간 일정으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방문,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함. 청와대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7일 코펜하겐을 방문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노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이 대통령의 회의 참석이 의미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 지난 7일 개막해 18일까지 계속되는 당사국총회에는 100개국 안팎의 정상들이 참여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17~18일 양일간 개최됨.
- 이 대통령은 17일 기조연설과 18일 공식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NAMA Registry) 제안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할 계획임.
- 특히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세계에 알림.

● **탕자쉬안 “中, 도광양회 전략 유지해야”(12/6)**

-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



- 린다)와 유소작위(有所作爲.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본다)를 병행하는 외교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함.
- 6일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탕 전 위원은 4일 베이징 외교학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겸한 특별강연에서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경솔하게 우쭐거리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의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를 잘 판단하고 중국이 여전히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중국이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로 올라섰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국제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이 도광양희와 유소작위의 병행 전략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잇따라 나온 바 있음.
 - 외교장관, 국무위원 등 요직을 두루 지낸 직업외교관으로서 탕 전 위원은 이날 현직에서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 ‘진위쉬펑(勁雨煦風·세찬비와 따뜻한 바람)’을 펴냄. 이 책에서는 1999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직후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외교관들이 현지 수습을 위해 앞다투어 지원하던 일 등 외교 일선에서의 경험담을 상세하게 담음.
 - 이 책은 중일 관계 및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남미와의 관계 개선 과정 등에서의 자신의 경험담도 담았지만 한반도와 북핵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은 실려 있지 않아 이 문제가 여전히 일반에 공개되기에는 민감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됨.
 -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후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의 복원을 이끌어냈고 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조문단 대표로서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음.

● 한국, 나토와 정보보안 MOU 체결(12/6)

- 지방재건팀(PRT)을 파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의 국제아프간치안지원군(ISAF) 참여하는 한국 정부가 나토와 ‘정보보안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나토 외무장관·아프간 지원국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클라우디오 비소그니에르 나토 사무차장과 MOU에 서명했다고 5일 밝힘.
- MOU 체결로 한국은 나토가 수집, 회원국에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하며 특히 아프간 전황 등 ISAF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차관보는 설명함. 이러한 점에서 정보보안 MOU는 사실상 한국의 ISAF 참여에 전제조건이었던 셈으로 PRT 파견에 앞서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의미를 갖음.



- 이 차관보는 또 PRT 파견과 관련, PRT와 보호병력 주둔지로는 카불 북부 파르완 주(州)의 주도 차리카르 외곽이 확정됐으며 나토, 아프간 정부의 행정적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밝힘.

● 라스무센 “美 동맹국 7천명 증파”(12/4)

-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병력을 증파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新) 아프간 전략에 미국 제외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7천명 추가 파병으로 화답함.
-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 외무장관회담 이틀째인 4일 기자회견을 열어 “25개국 이상이 내년에 약 7천명의 병력을 추가로 아프간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더 많은 국가가 더 많은 증파 계획을 밝힐 수도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우방들이 행동으로서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높이 평가함.
-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그러나 추가 파병을 약속한 국가 가운데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어디인지, 개별 나토 회원국의 병력 증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함.
- 라스무센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날 오전(현지시각) 나토 외무장관들이 비(非) 나토 회원국으로서 국제 아프간치안지원군(ISAF)을 지원하는 국가의 당국자들과 연석회의를 가진 뒤 나옴.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신 아프간 전략을 설명 듣고 증파 계획을 논의함.
- 클린턴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아프간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며 우리는 함께 이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라면서 병력 증파 등 우방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짐. 이 자리에는 한국 정부 대표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참석, 지방재건팀(PRT) 및 보호병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고 PRT 부지 선정과 관련해 나토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짐.
-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연석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곧 공식적으로 ISAF 지원국이 돼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차관보의 연석회의 참석을 환영함. 한편, ISAF 지원국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최근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부패 척결과 부족 간 통합·화해, 법치 확립, 인권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함.

● 게이츠 “미군증파 최대 3만3천명까지 가능”(12/4)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아프가니스탄 미군 증파 병력이 3만명에서 3만3천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힘. 게이츠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프간 주둔 현직 미군사령관들이 의무병이나 사제폭발물(IEDs) 탐지훈련병의 추가파병 요청을 해오면 파병병력의 수를 탄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



의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또 아프간에 증파하기로 미군의 수를 이미 발표한 3만명에서 필요하면 최대 3천명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승인받았다고 전함. 이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프간 주둔 미군 증강이 단지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근거지를 둔 알카에다 세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세계 극단주의 테러집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함.
-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아프간과 파키스탄 그리고 그 외 지역의 다양한 무장세력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이 신디케이트처럼 연계돼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알카에다는 과거 마피아로 치면 이러한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말함. 이와 함께 클린턴 장관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아프간에 추가 파병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함.
- 클린턴 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회의의 참석차 출국하기 앞서 “우리는 내일 수차례 추가병력 파병에 대한 발표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주둔 미군 3만명 증강 발표가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음.

● 푸틴 “경제위기 정점 지나 대선출마 생각”(12/3)

-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3일 경제가 위기의 정점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반(反) 위기 극복 정책의 성과가 크다고 자평함.
- 푸틴 총리는 또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때라면서도 아직은 시간이 있고 출마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혀 차기 대선에 나설 생각임을 강하게 시사함.
- 푸틴 총리는 아울러 이란의 핵무기 개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서방의 이란 제재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어 주목을 끌음. 푸틴 총리는 이날 정오부터(현지시간) 국영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1년간 많은 기업을 방문하면서 경제 위기 여파를 직접 목격해 왔다”면서 “이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는 “지난 1년은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힘든 한 해였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러시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고 물가상승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경제 위기와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 또 그는 “1998년 경제 위기 당시 겪었던 무서운 결과들을 이번에는 피할 수 있었다”며 “10년 전 물가상승률이 84%였는데 지금은 9% 정도며 그때와 달리 은행 시스템도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함. 지난



달 27일 발생한 열차 테러 사건을 비롯한 러시아 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에 관한 질문에 그는 “오래전부터 테러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도 위협요소가 있다”면서 “러시아는 그 면적이 너무 커 테러를 사전에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부처가 테러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탓에 그들이 한층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이번 열차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북카프카스 지역 내 이슬람 반군 세력에 대해 “반군이 사라질 때까지 싸움을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설명함. 그는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말에 “우리는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교수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메드베데프와의 관계는 매우 좋고 그 때문에 효과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함.
- 최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푸틴 집권 시절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면서 푸틴과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음. 더욱이 2012년 대선 출마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크렘린 내 정치권력 구도 향배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
- 이날도 푸틴 총리는 “2012년 대선 출마를 생각해보겠다. 시간은 충분하다. 현재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일을 해내야 한다. 경제, 사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난 후 대선에 대해 생각하겠다. 아직 2009년 일 뿐이다”라고 말함.
- 푸틴 총리는 또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 “WTO 가입은 우리의 전략적 목표인데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러시아의 WTO 가입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함.
- 러시아는 최근 관세 동맹을 맺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과 공동으로 WTO 가입을 추진 중인데 미국 등은 농업 부문 보조금 지급,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관련 법 개정 미흡 등을 이유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푸틴 총리는 양국 통상 관계의 걸림돌인 ‘잭슨-베닉’ 수정안이 러시아의 WTO 가입을 막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구소련 국가들도 관세동맹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함.
- 1974년 만들어진 ‘잭슨-베닉 수정안’은 유대인 및 종교적 소수자들의 자유 이민을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옛 소련이나 여타 계획경제 국가들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러시아는 1994년부터 이 조치에 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 의원들은 러시아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맺기 전에 러시아가 WTO 가입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푸틴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러시아가 서방의 대(對) 이란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회피함. 또 우크라이나 대선과 관련, 올리아 티모셴코 총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실무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결코 그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당(통합러시아당)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역당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이는 이번 대선에서 티모셴코 총리 등과 경쟁하는 지역당 당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음.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전 총리는 2004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지지 속에 승리했지만, 부정 선거 시비로 오렌지 혁명이 일고 이듬해 재선거에서 지금의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에게 패한 바 있음.
- 푸틴 총리는 또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의 사이를 묻는 말에 “그와 일하는 동안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서 “부시는 점잖은 사람이며 좋은 친구로 그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쁜 일이 것”이라고 답함.
- 이밖에 스탈린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산업화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압제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그의 유산이 모두 잘됐다고 혹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균형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함.

● 李대통령, 신임 주한대사 6명 신임장 접수(12/3)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콘스탄틴 바실리에비치 브누코프 러시아 대사 등 신임 주한 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고 환담함.
- 이날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주한 대사는 브누코프 대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압델 레힘 엘 조르카니 이집트 대사, 한스 울리히 자이트 독일 대사, 하이메 레오넬 라소 델 카스티요 파나마 대사, 마거릿 클라크 퀴에시 가나 대사, 에르도안 셰리프 이쉬잔 터키 대사 등임.

● 대만, 中國호로 국제회의 첫 참가(12/3)

- 대만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국제회의에 참가한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일 보도함.
- 신문은 대만 언론을 인용해 오는 7일 개막하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는 대만공업기술연구원, 대만환경질량문교기금회, 대만영속에너지연구기금회 등 3곳의 연구기관이 소속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표기해 참가신청을 했다고 전함.
- 대만이 1949년 분단 이후 ‘중화민국’이나 ‘중화타이베이(中華臺北)’가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대만 환경보호연맹의 쉬광룽(徐光蓉) 학술위원은 “기후변화 회의 등은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국호 등 정치적 문제로 참가를 거부하는 것은 대만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명분보다 실리를 강조함.

● 한·헝가리 정상, 교역투자 확대 합의(12/1)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민 방한 중인 쇼음 리슬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양국 정상은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 성장 분야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도 힘을 모으기로 함.
- 이 대통령은 “한국과 EU(유럽연합)간 관계뿐 아니라 한국과 헝가리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한-EU FTA의 조속한 서명·발효로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또 이 대통령은 “EU 자체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EU 역내국들이 균형되게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한-EU FTA가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쇼음 대통령은 “EU와 한국간 FTA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힌. 이어 “헝가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유럽과 발칸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헝가리 투자 확대를 희망함.
- 두 정상은 또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는 기초과학 협력사업을 하기로 합의함.
- 이밖에 이 대통령은 쇼음 대통령이 ‘그린 프레지던츠 네트워크(Green Presidents Network)’ 구상을 통해 세계 환경 보전을 주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헝가리가 안익태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는 등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한국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사례함.

● 오바마, 새 아프간전략 최종결정..지시하달(12/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증강과 출구전략 등 새 아프간 전략을 최종결정해 군 수뇌부와 안보담당 참모들에게 공식 통보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30일 밝힘.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맨 먼저 전화로 결정사항을 알려준 데 이어 백악관 안보회의를 소집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에게 최종 결정사항을 통보했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회의가 끝난 직후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과 칼 아이켄베리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에게도 전



화를 걸어 지시사항을 전달함.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새 아프간 전략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기브스 대변인은 전함.
-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정상에게 새 아프간 전략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지만 증파되는 미군 병력의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함. 기브스 대변인은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새 아프간 전략의 최우선 목표가 아프간 보안군을 훈련시켜 그들이 반군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힐 것이라고 전함.
- 그는 “아프간 보안군에 대한 훈련이 새롭게 강조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곳(아프간)에 영원히 주둔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아프간 안보를 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아프간의 안보책임을 아프간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아프간이 보안군 훈련증강을 통해 안보에 대한 책임을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 내년부터 미군 3만 5천여명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이럴 경우 아프간 주둔 미군은 10만명에 달하고 한 해 전비도 7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더라도 앞으로 3-5년에 걸쳐 미군 병력을 서서히 감축하면서 이 지역 치안을 아프간 보안군에 넘기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백악관은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을 2017년 또는 2018년에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맥크리스털 사령관은 의회에서 철군을 2013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음. 하지만 새 아프간 전략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칼 레빈(민주) 상원 군사위 위원장은 전날 미국의 아프간 주둔 병력 증강은 아프간 보안군의 증강과 반드시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며 아프간 전쟁 승리는 미국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레빈 위원장은 “핵심은 아프간군의 증강이지 미군의 증강이 아니다”라며 “우리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함.

● <中, 주변국과 군사외교 강화>(11/30)

- 중국이 최근 들어 주변국과의 군사외교를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중국의 국방부장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군 수뇌부들이 최근 미국과 일본, 러시아, 북한, 동남아시아



- 아 등 주변국들을 순방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음.
- 가장 먼저 쉬차이허우(徐才厚)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10월 말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군사·국방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다짐함. 양국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해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분야, 군 의료분야, 군 문화·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강화 등 7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함.
 - 게이츠 장관이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고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상호방문기로 함.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도 지난 22일부터 북한을 방문한 뒤 27일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태국 등 동남아시아 방문을 시작함.
 - 량 부장은 방북 기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를 다짐함. 그는 이어 27일 일본을 방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국방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사상 처음으로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기로 하는 등 9개항의 협력방안에 합의함. 과거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등에 따른 역사적 앙금이 남아 있는 양국 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기타자와 방위상도 량 부장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참모총장)도 내년에 중국을 찾기로 함. 량 부장은 이어 태국을 방문해 동남아 국가와의 군사협력도 모색함. 이와 별도로 귀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함.
 - 귀 부주석은 방문기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함.
 - 이번 방문에서 중국 측은 미국과 유럽이 군사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도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군 수뇌부는 해외 순방 외에도 베이징을 방문한 브라질의 넬손 조빙 국방장관과도 만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또 이달 초에는 인민해방군 공군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한국 등 전 세계 34개국 공군대표단을 초청,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도 함.
 - 중국이 부쩍 주변국과의 군사외교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 동남아시아 등 각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각국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중국의 국방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 안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지가 깔린 것으



로 분석하고 있음. 아울러 자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를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